

독립군 정신과 전원이 운영을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서는 조직 체계도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권위의식'이나 '상하관계'같은 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재 사랑방에는 '간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출직인 '집행조정장'은 2년 임기로 '조정'역할을 할 뿐이며 대외적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맡은 일이 다를 뿐 그것이 지위고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맡은 일에서 전원이 외부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다. 사랑방의 주요 결정은 상임활동가총회에서 이뤄진다.

사랑방의 독립군 정신, 즉 재정 및 조직 운영 체계는 아직도 '실험' 중이다. 그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사랑방 활동가들이 얼마나 마음을 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전부 다하려는 욕심이 있는 한편 먹고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운동에 들어오고, 자기 생계일을 하면서도 조금씩 인권운동을 하는 가운데 자원활동가와 직업활동가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꿈을 사랑방 활동가들은 꾸고 있다.

## 인권운동사랑방 10년 그리고 내일 2. (98년~현재까지)

일시 : 2003년 2월 15일 12시-오후 3시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3층 회의실

참석자 : 김영원, 김정아, 배경내, 범용, 유해정,

이주영(사회), 이창조, 허혜영

(부분 참여 : 류은숙, 최은아)

## 1998년

- 1998년 3월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불법검문에 대한 불복종 운동
- 7월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 진상조사 활동
- 보안관찰법 워크샵 및 보안관찰법 대응활동
- 준법서약제 반대 입장 표명
- 9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추위 활동
- 전국 교도소 행형 실태 조사 및 『한국 감옥의 현실』 발간

### <불법검문 불복종 캠페인>

인권운동사랑방은 1998년 상반기에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이란 모토를 내걸고 경찰의 불법검문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주영(아래 주영)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을 첫 시작으로 98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 활동이 시작된 발상이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이죠.

이창조(아래 창조) : 경찰의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인권 문제로 제기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97년 한총련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면서 당시 각종 집회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이 학생들의 집회 출입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했었고 인권하루소식에서 종종 주목을 했죠. 인권하루소식이 이슈파이팅 성격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주의를 환기시켰거든요. 기사를 내보내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러던 중 사랑방에 자원활동으로 오게 됐던 한 친구가 이 문제를 직접적인 활동으로 연결시켜보겠다고 했죠.

주영 : 이영태 씨죠?

창조 :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활동으로 외화가 됐던 거예요. 사랑방의 기존 상임 활동가들 중심은 아니었고 주로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원활동가들이 주요 동력이 돼서 이 캠페인을 전개했죠. 우선 반향이 좋았고 각 대학에서 이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경찰에서 초반에 이 문제를 무시한달까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아 빠뜨린 얘기가 있어요. 불심검문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고 그것이 승소 판결을 얻어내면서 이 운동의 정당성이 확고해졌었죠. 계속 캠페인을 진행해서 얻어낸 성과는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거구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면서 불심검문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불심검문을 가지고 소송이 여러 차례 진행됐는데 제가 알기로 100% 승소했고 이를 계기로 과도한 불심검문이 수그러들었고 일반인들이 불심검문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 성과인 것 같아요.

주영 : 활동의 모습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일종의 직접행동, 예를 들면 불심검문이 어디서 벌어진다, 사람들이 집회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집회 참가자들이나 학생들과 같이 불복종하는 활동들을 시시각각 벌였죠?

창조 : 일상적으로 불심검문의 문제를 선전하는 활동과 제보·접수 신고를 바탕으로 한 현장 투입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활동이 전개됐어요. 그중 후자의 경우 독특한 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무실로 불심검문과 관련한 인권피해에 대해 전화해달라고 홍보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접수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면 일종의 행동단, 불심검문 저지 행동, 불심검문 감시단이 현장에 직접 투입돼 경찰과 맞부딪쳐 싸우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들이밀고 '이러저러해서 당신들의 행동이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을 많이 했고 저희가 대부분 이겼죠 아마. 집회 현장,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중요집회에 저희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할 때는 전투경찰이 대거 투입되고 현장에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검문하곤 했는데 불심검문 감시단이 투입돼서 경찰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불심검문을 일시적으로나마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 폭로>

1998년 7월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성재 국회의원, 김병후 연세정신클리닉 원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과 언론사 취재진 등 40여명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소재 양지마을을 기습적으로 방문, 강제감금과 노역, 구타 및 강제투약 등의 불법인권유린 실태를 확인, 고발하는 활동을 벌였다.

사회 : 7월로 가면, 부랑인수용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 제보를 저희가 받고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는데요. 그 사건은 사랑방 내적으로도 충격적이었고 사회적 파장도 컸는데, 당시 인권하루소식 기자로서 직접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이창조 씨가 이야기 좀 해주세

요

창조 : 양지마을이란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한 수용자가 탈출을 해서, 여러 단체들을 찾아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단체들에서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라'고 하는데, 사지를 탈출한 사람한테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아무 것도 없죠. 맨몸으로 탈출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실의에 빠진 상태였는데, 한 공원에서 동국대 학생이 목격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사랑방에 같이 왔던 거죠. 온몸이 상처투성이 담 뛰어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온 몸에 상처가 입은 그 분을 사랑방에서 일단 머물게 하면서 저희가 15일 동안 계속 인터뷰를 했어요. 결국 양지마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곳에 들어가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회에 공론화 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여러 곳에 제안을 했죠. 방송사, 언론사, 국회의원, 인권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양지마을과 함께 있는 송현원은 일종의 정신병원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분까지 모두 20~30명이 모여서 날을 잡고 밤에 출발했죠. 천안 현지에 도착해서 작전회의를 하고 새벽에 기습을 했습니다.

그쪽에선(양지마을 측에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문을 열어줬는데 우리가 막 들이닥치니까 아차 싶은지 문을 닫고...

배경내(아래 경내) : 그때 밖에서 따지 않았어요?

창조 : 아, 처음에는 (양지마을 측에서) 문을 열어줬는데 다시 문을 닫으니까 우리가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밀치고 문을 안에서 열고 뛰어들어간 거죠. 내가 그때 담을 넘었어요. (모두 웃음)

주영 : 무용담은 좀 줄여 주시구요. 양지마을의 상황은 어땠나요?

창조 : 제보들은 바대로 양지마을은 모두 쇠창살이 돼 있고 방문을 밖에서 잠그게 돼 있었어요. 폐쇄된 시설에서 강제노역, 강제구금, 구타 등의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사실을 수용자들을 만나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양지마을에서 나와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 20여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 작업을 했고, 그 내용을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국 양지마을 원장이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사소송은 1심에서 승소를 했죠.

주영 : 작년의 일이었죠?

창조 : 그것도 참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소송을 한 건 98년인데, 무려 4년만에 겨우 1차 심리가 끝나서 선고가 내려졌던 거죠.

주영 : 근데 재판에서 강제구금은 인정됐는데, 강제노역은 인정이 안 돼서 한계로 지적되지요. 앞으로 2심까지 가는 일정이 남아있고, 아직 양지마을 문제는 끝나지 않은 거죠.

김정아(아래 정아) : 그 분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흩어지고 또다시 부랑인이 되기도 했지요.

창조 :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나오면 바로 이분들이 재활이나 자활, 독립 정착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국가에선 전혀 그런 지원이 없고. 하다 못해 재판이라도 빨리 진행돼서 그 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기반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차일피일 공무원과 양지마을 측이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에 법원이 휘말리면서 소송까지 늘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반이 없는 수용자들이 다시 부랑인으로 돌아가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겼던 거죠.

주영 : 양지마을 인권유린 조사 활동의 파장은 양지마을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던 것 같은데요.

창조 : 양지마을 문제로 인해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사회가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활동으로 계속 진행되진 못했죠.

정아 : 사랑방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양지마을이 처음인가요? 그전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창조 : 최초 관심은 에바다(장애인시설)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에바다 문제가 96년에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저희가 직접 활동을 전개하진 못했고 저희의 관심을 활동으로 외화시킨 것은 양지마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주영 : 그 이후도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에바다 농아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계속 하고 있구요.

### <보안관찰법 대응>

이른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와 내심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보안관찰제도 하에서 피처분자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98년 보안관찰 피해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며 보안관찰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한다.

창조 : 보안관찰법 대응은 무척 의미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보안관찰법의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 피해자 중에서도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인권 문제잖아요. 사랑방이 보안관찰법 문제를 공론화시키자고 해서 조사활동을 시작했고 피해자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졌어요. 보안관찰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것이 발단이 돼서 보안관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됐던 걸로 기억해요.

유해정(아래 해정) : 많은 분들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여러 분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어요. 또 정부가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정보를 비밀정보로 분류해서 공개가 되지 않아거든요. 이를테면, 현재까지 보안관찰처분자가 얼마인지 현재 보안관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묻혀 있었는데, 99년에는 보안관찰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어요. 이후 재판부가 보안관찰 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6-7천명 정도가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하지만 98년, 99년까지는 이 운동이 진행되다가 사랑방 내에 특별한 담당자를 두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조직됐던 힘도 떨어지고 이제는 거의 피해자 분들이 개인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 <준법서약제에 대한 반대>

98년 7월 정부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2의 사상전향,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가 더욱 교묘해진 형태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제도라며 반대입장을 밝힌다.

주영 : 98년 정부가 사상전향제를 폐지한다고 큰소리 뺏치고 내놓은 것이 준법서약제였는데요.

창조 : 98년 7월이었던 것 같은데,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상전향 문제가 김대중 정부 들어 첫 인권 이슈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사상전향제를 폐지한다는 말을 앞세우며 준법서약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인권의 진전인 것처럼 홍보가 되었죠. 그러나 사랑방을 비롯해 민변, 민가협 등은 사상전향제 폐지 플러스 준법서약제 도입이란 정부 발표가 나온 날, 즉각 반박 성명을 냈죠. 무늬만 바꾼 사상 탄압제도라는 판단을 내리고 준법서약제에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인권단체 내에서도 준법서약제를 일정한 인권의 진전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준법서약제를 무력화시키거나 없애는, 즉 사상전향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인권단체들의 힘을 모으지 못했던 것이 당시 인권운동의 한계, 아쉬움이었던 것 같네요.

주영 : 그래서 2003년인 현재, 새 정부가 해야 할 인권 과제 중에 하나로 아직까지도 준법서약제 폐지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 <감옥인권 활동>

- 1998년 3월~12월 전국 교도소 행형 실태 조사 및 '한국 감옥의 현실' 발간
- 1999년 6월 행형법 워크샵 개최 등 '감옥의 인권' 활동
- 2001년 '감옥 인권팀' 홈페이지 개설 (<http://antiprison.org>)
- 2002년 4월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공동 주최

인권운동사랑방은 98년 전국 교도소 행형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감옥의 현실'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했고 이후 행형법 워크샵, 감옥인권 문제 상담 및 사례 분석, 구금시설 내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활동 등 '간힌 자들의 빛'이고자 감옥 인권 관련 여러 활동을 진행해왔다.

주영 : 전국 교도소 행형 실태 조사 및 한국감옥의 현실 발간이 98년에 이뤄진 일인데요. 이를 계기로 사랑방의 감옥인권 활동을 주욱 이야기해보죠.

해정 : 교도소 내의 인권문제라고 하면 양심수들의 문제로 한정됐던 게 사실인데 사랑방은 양심수를 넘어 일반 수용자들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7년에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나온 윤치고 씨가 사랑방에 찾아와 청송보호감호소 내 인권유린,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얘기해주면서 청송보호감호소에 관심을 갖게 됐고... 당시 국내에는 교도소 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었는데, 98년 인권운동사랑방은 대대적인 행형실태조사에 나섰던 거죠. 당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이 했죠. 1년 가까이 실태조사가 진행돼서 약 2백명 정도의 설문지를 회수했어요. 설문 문항도 약 2백문항 정도로 방대했고 응답하는 데만도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거였어요. 그걸로 미뤄본 교도소의 실태는 매우 열악했죠. 과밀수용 문제, 교도소 내 가혹행위, 집필·서신 문제, 의료 문제, 징벌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어요. 당시 감옥인권실태조사를 계기로, 교도소 문제를 한때의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사랑방 내에 감옥인권팀이 만들어졌고요.

사랑방이 하는 활동은 수용자들의 상담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활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학자들이나 변호사, 학생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감옥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싸울 지에 대해 얘기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범용 : 감옥인권모임은 언제 만들어졌죠?

해정 : 모임은 98년 감옥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시작하면서 얘기가 됐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사랑방 내의 인적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행형에 관심있는 교수, 변호사, 학생들을 모았고 맨 처음 성과가 감옥인권의 현실이란 책이었어요. 또한 교도소 내 인권유린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만들자면서 99년에 계속 활동이 지속됐구요. 그러나 행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협소하고 추구하는 방향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모임이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어요.

주영 : 사실 인권 문제는 무척 많은데 사랑방이 특히 감옥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진보적 인권운동'으로서의 맥락도 있잖아요.

해정 : 감옥인권을 하다보니까 형법 자료나 통계들을 보면, 많은 범죄들이 사회구조로부터 파생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지금도 6만에서 7만 정도가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데 그 중 절반이 절도범들이고 나머지 30-40%가 절도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기라든가 그런 범죄예요. 나머지가 이른바 강력범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해 범죄학이나 형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해답은 범죄는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구조나 소외, 경제적 빈곤이 자연스레 이런 범죄 발생을 유도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처럼 고도화되는 빈곤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기보다는 한탕이나 누구에게 보복을 하면서 쾌감을 얻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어서 잘 쳐우시켜 내보내면 범죄발생율이 줄 것이라는 건 오류가 있다는 거고 사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창조 : 저는 사랑방 내에서 이 부분이 정리된 건 아니라고 보지만, 감옥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격리하고 구금하는 제도이고 인간의 기본권 중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과거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의 특정 집단을 구금하는 시스템으로 안정화된 건데 감옥에 의한 격리와

구금의 시스템 자체가 바람직한 건가 이것이 인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런 것이 감옥 인권 문제에 주목하는 한가지 중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옥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실태조사 하면서 교도소에 직접 가서 출소자들을 만나던 것, 사실 민간단체가 수용자들과 직접 대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출소자들을 기다려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수도 없이 교도소를 방문했죠. 10분도 안 되는 시간동안 면회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하고 말이지요. 매우 제한된 여건 속에서 감옥 활동이 진행돼 왔던 것이고, 국가인권위가 생기면서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할텐데, 인권위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랑방의 활동이 그렇게 진행돼 왔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정 : 사랑방에서 감옥인권 활동을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감옥인권에 대한 사회화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도 있어요. 사람이 죽거나 과도한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회는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고, 그런 사람, 범죄자에게까지도 사회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감옥인권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인권 활동이 일정한 편향을 가졌는데, 일단은 주로 소송 중심으로 갔어요. '현재 명문화된 규정은 이렇게 돼있는데 교도소에서는 왜 이걸 준수하지 않냐'는 식으로 법적인 문제로 많이 갔던 거죠. 그런데 수용자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회화시키기 어렵고, 사회화시킨다 하더라도 증인이나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무척 어려웠죠.

<국가인권위 관련 활동>

- 1998년 9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추위' 결성 및 참여
- 1999년 4월 인권활동가, 정부 인권법안 철회와 인권법 재논의 촉구 1주일 단식농성
- 1999년 4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재편, 활동
- 2000년 12월~01년 1월 인권활동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촉구 13일 노상단식농성]
- 2001년 7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 결성 및 참여
- 2003년 1월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 결성 및 참여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까지 인권운동은 3년여에 걸쳐 사력을 다했다. 그 중심에는 29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와 공추위가 74개 단체로 확대 개편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있었다. 민간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설계를 맡은 법무부의 독단을 물리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2001년 4월 30일 독립성을 확보했으나 조사권한은 한참 미약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비민주성과 심판관을 넘지 못하는 태도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에 산파 역할을 했던 인권단체들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름에 걸맞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하며 올바른 활동을 촉구해야 할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인권위 설립운동에 참여했고, 현재는 인권위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영 : 이제 국가인권위 설립 운동에 대해 얘기해봤으면 하는데요. 왜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98년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때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경내 :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관심이 한국의 인권단체들 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은 93년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때부터인 것 같아요. 국가가 인권옹호를 기본적인 책임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인권을 옹호하는데 쓰기 보다는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은 '국가가 인권을 옹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를 국가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자', '국가기관 내부에 국가권력을 감시, 견제,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정화장치를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인권위에 대한 구상으로 발전했고,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했던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설치를 국가에 요구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스스로 인권대통령을 내세웠고 국민의 정부, 인권 정부를 만들겠다 호언장담하면서 대표적인 개선장치로 이야기했던 것이 국가인권위였어요. 그런데 인권위가 설치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무부였죠. 검찰이나 교정시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무부가 먼저 인권법안을 98년 9월에 들

고 나왔어요. 그 내용이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원장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권위는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는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자리잡아온 법무부가 관할하는 국가인권위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98년 9월 17일날 광범한 인권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올바른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 설치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추진위를 만들고 공추위의 이름으로 법무부 인권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에 정부는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장식품으로서 국가인권위 설치를 구상했던 것 같고 98년 12월에 법안 통과를 기본 목표로 했었죠. 98년이란 것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인권옹호의 의지를 천명하는 대표적 장식품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광범한 인권사회단체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이때부터 법무부와 공대위 사이의 지속적인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법안을 밀어붙이는 법무부를 주저앉히는데 우리가 일정 정도 성공을 했던 것 같고 이듬해 임시국회 국면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법무부가 일정하게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개정안을 들고 나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또다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이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여당 인권위원장 유선호 의원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에 법무부의 광범한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4월 임시국회 통과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던 상황에서 인권단체들 사이에선 법무부 인권법안에 따라 인권위가 설치되는 것은 설치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합의가 이뤄졌고 명동성당에서 1차 단식농성(99년 4월)을 진행했지요. 그때 농성에 참여했던 사랑방 사람은 유해정, 최은아, 유점열 씨였죠. 이 단식농성을 계기로 인권기구 설치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법무부 인권법안 자체의 저지를 분명한 목표로 하는 공대위(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로 전화하게 됐어요.

이후 법무부의 통제와 간섭을 허용하는 국가인권위 설치라는 법무부의 구상 자체를 저지하면서 공대위가 이 싸움에서 법무부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러나 동시에 공대위가 설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기구를 설치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당 경우는 법무부 눈치를 보고, 법무부는 이것을 강행했을 때 불러올 수 있는 광범한 저항을 의식하면서 두 쪽 다 (국가인권위 설립) 추진의 힘을 잃었죠. 9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일정한 소강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9국민회의 정책위원장이 광범위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는 법무부 인권법안은 통과시

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 99년 말의 상황이었어요.

주영 : 2001년 4월 30일 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전후의 상황을 이야기해보죠.

창조 : 2000년 한해 동안 지루하게 논쟁이 계속되었던 거죠?

경내 : 논쟁이 계속되면서, 국가인권기구가 어떤 원칙 하에 설치되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전문가와 인권단체가 우위를 점하게 됐지요. 반드시 새로 설치될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기구의 견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합의였죠.

창조 : 논쟁만 진행되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에 맞게 인권위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인권단체들이 선택했던 두 번째 투쟁이 2000년 12월 말부터 2001년 1월 초까지 13일 동안 진행했던 2차 단식농성이었죠.

그때 인권위법 제정만을 이슈로 했던 것은 아니었고, 김대중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 그래서 정권 교체기로 정치일정자체가 나아가는 시점이고 더 이상 개혁적 조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폐쇄하고 또한 인권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거지요.

주영 : 당시에 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활로가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단식농성이 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범용 : 유도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모두 웃음)

주영 : 당시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단식농성이 '몸뚱아리를 던져 투쟁의 불씨를 당겼다'는 거였는데요. (모두 웃음)

경내 : 2차 단식농성이 많은 주목 속에 진행되면서, 당시 김대중 정권 말기에 표류하는 개혁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고... 그래서 인권위법이 다시 추진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 : 그래서 결국 98년도 법무부가 처음에 내놓았던 법안에 비하면 너무도 달라진,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법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거였죠.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가 가져야 할 각종 권한이 애시당초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또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활동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런 한계를 가진 국가인권위법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국가인권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시점에서, 공대위는 국가인권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스스로 해소하는 결정을 내렸구요. 이후 두어 달 동안 인권위법 통과 이후에 인권단체들의 활동도 중단이 됐다가 2001년 7월부터 다시 사랑방을 포함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의 올바른 설립을 위한 활동을 재개하게 되죠. 그것이 7월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창립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주영 : 국가인권위가 2001년 11월 26일에 출범하게 되는데, 사실 출범 과정 자체가 애초 기대와 달리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았죠.

창조 : 사랑방과 국가인권위의 관계에 맞춰 이야기를 해보면, 사랑방은 98년도 최초 민간단체 공대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국가인권위 설치를 내부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인권위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여왔지요. 그러다 98년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대위에 참여했고 1차, 2차 단식농성에 가장 전투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막상 인권위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어떠했는가 보면, 인권위법이 통과되고 난 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판단 하에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라는 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자 했으나, 2001년 국가인권위 출범을 위한 기획단 문제와 결부되면서 인권위 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한발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견인하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입장에서 인권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죠.

주영 : 작년 2002년이 국가인권위가 출범하고 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첫해였는데요. 국가인권위를 인권운동사랑방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최근의 '열린회의(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범용 : 국가인권위원회가 매우 광범위한 인권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도 명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진단하기가 벽찬 감이 있어요. 다만 국가인권위 활동이 하나둘 이뤄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아니다'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드러난 거죠. 대표적으로 설립 과정에서 비민주적이었던 부분, 예를 들어 공대위 시절에 매우 열심히 참여했던 인권단체들을 소외, 배제시키고 출범하면서,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계기로 인권운동이 활력소를 얻기보다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꾸준하게 인권운동을 해왔던 인권단체들 간에 오히려 입장 차이를 증폭시켰고 전반적으로 인권운동의 기운을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 자체가 갖는 인권적 진보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기관 이름으로 구급시설의 실태조사, 방문조사를 한다거나 인권정책에서 이전에 국가기관이 갖지 못했던 정책권고를 한다거나 한계적인 법이나 나름대로 열심히 활용하면 인권 신장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작년의 국가인권위 활동을 보며 실망감으로 변해갔죠. 회의 운영도 그래요. 광범한 시민사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국가인권위가 잘못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국가인권위가 법무부나 감옥, 기존에 인권을 침해해왔던 국가기관에 맞서 싸울 때는 시민사회의 힘을 뒷받침해서 싸워야 하는데 인권단체와의 설립과정에서부터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문제가 있죠. 또한 국가인권위가 한국사회 인권을 비약적으로 신장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2백, 3백퍼센트 활용하면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의 부재로 인해 급속히 관료화되는 모습이 지난 한해 드러났고 얼마전 공대위 시절 공동집행위원장이었고 국가인권위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박노현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영 : 그래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란 이름으로 사랑방을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모였고, 그 기구가 앞으로 국가인권위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을 하리라 우린 기대하고 있는 거죠?

경내 : 국가인권위와 관련해 공추위, 공대위, 연대회의를 만들면서 의의가 있었던 것은 예전에는 인권단체들이 공동의 대응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좁은 틀에서 모였는데, 국가인권위의 올바른 설치, 바로세우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 노동, 장애 모든 범위의, 그러니까 기존의 좁은 틀의 인권단체들이 아닌 광범한 사회단체들이 인권이란 이름 하에 모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 개념의 폭을 넓히고 특히 운동 사회 내에서 인권이란 것을 중심적인 화두로 광범하게 연대할 수 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같이 모였던 인권단체들 내부의 분열로 이 운동이 끝을 맺었지만, 운동 사회 내에



서 인권에 대한 관념이나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위치를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돼요.

## 1999년

- |          |   |
|----------|---|
| 1999년 3월 | 청소년 인권교재 「인권교육길잡이」 발간   |
| 4월       |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를 위한 명동성당 단식농성<br>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 재편 및 활동 |
| 5월       | 지하철 파업 당시 인권침해 실태 조사  |
| 6월       | 행형법 워크숍 개최 등 '감옥의 인권' 사업  |
| 8월       |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인권캠프 개최   |
| 9월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활동  |
| 12월      | IMF 이후 사회권 실태조사 및 「인간답게 살 권리」 출간                                    |

###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

- 1999년 5월 지하철 파업 당시 인권침해 실태 조사
- 2000년 7월 롯데호텔 노조와 사회보험노조 파업장 경찰력 투입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 2001년 3월 대우자동차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 조사
- 2002년 5~6월 발전노조에 대한 인권탄압 실태 조사

주영 : 99년부터 매해마다 있었던 노동인권 침해 조사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창조 :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가운데 한가지가 노동권에 대한 침해인데, 사랑방이 인권단체로서 노동권 사안에 결합해서 활동한 경험이 초반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인권단체로서 이 사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합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99년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당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작업이 진행됐고, 2000년에는 롯데호텔 노조와 사회보험 노조 파업 당시 공권력의 강제 진압, 2001년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그 이후 진행됐던 일련의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행위들, 2002년에는 발전노조 파업에 이르기까지 매해마다 한차례씩 개입을 했는데, 인권운동사랑방은 노동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노동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 이를테면 롯데호텔 파업 과정에서 공권력이 침투해 노동자들을 성희롱한 문제나 지하철 경우에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의 자유권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노동사안에서 인권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했었고 여기서 인권단체의 특징적인 부분이 자유권 관련 부분이고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조사활동을 비롯해서 인권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려했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안들이 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문제라 파업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논리들을 개발하고 인권단체로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해정 : 아쉬운 건 매해 비슷한 시기에 노동권 침해가 예상되기도 하는데, 사전에 어떻게 인권침해를 막고 어떻게 파업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비할까에 대한 노력보다는 일 정정도 사안이 종료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권단체의 활동을 한정지었던 거예요.

창조 : 인권단체로서 노동권 문제를 어떻게 활동 영역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상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진전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전의 파업 같은 경우에는 사랑방이 실태조사를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면 대우자동차 문제나 발전파업의 경우에는 사랑방이란 한 단체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인권단체들의 연대활동, 공동의 고민으로 만들어가려고 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권교육실 활동>

- 1999년 3월 청소년 인권교재 '인권교육길잡이' 발간
- 1999년 7~8월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인권캠프 개최.  
어린이 캠프 매해 여름마다 지속
- 2000년 12월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번역·출간
- 2002년 1월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대학생 인권캠프 개최

주영 : 인권교육길잡이가 99년 3월에 발간됐는데, 인권교육길잡이의 발간부터 시작해 99년 이후 인권교육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경내 : 제가 사랑방에 찾아온 게 인권교육실이 정식 부서 중 하나로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했는데, 사랑방이 인권교육을 중요한 인권운동의 과제로 위치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 도덕 과목 폐지하고 인권과목 설치하라는 이야기도 했고,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노력이 밖으로 외화되어 나타난 게 인권교육길잡이죠.

인권교육길잡이는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인권에 관한 기본 개념들을 소개한 책이기도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인권교육 방법론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담은 최초의 인권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인권교육길잡이가 만들어지고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진 것 같고 인권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에게 미흡하지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된 게 나름의 성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재를 발간하거나 우리를 향해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게 아니라 인권교육을 함께 하자고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내자는 생각을 하면서 99년부터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3개의 인권캠프를 여름방학 때 진행하면서 인권교육의 전형을 만들어내는데 사랑방 교육실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와 함께 인권 분야에서 쉽게 인권의 의미, 가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알기 쉬운 교재, 읽을거리가 매우 부족한 데 그나마 99년에 번역, 출간된 '깨어나, 일어나'가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다른 민간단체들도 중요한 활동의 분야로서 인권교육을 설정하고 초

중등학교의 선생님들도 자신의 교실에서 인권교육을 실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랑방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사 인권교육 워크숍, 민간단체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들을 사랑방이 주최해서 그 고민을 나누는 장으로 삼기도 했죠.

김영원(아래 영원) : 저도 인권교육실을 통해 처음 사랑방에 오게 됐는데, 사실 교육실 일을 하게 된 건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를 하는 곳이 인권교육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잘 모르면서 교육실에 들어와 재미있게 프로그램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다 지금은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큰 매력이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인권교육길잡이는 9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많이 읽히고 활용되니까 계속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으는 작업을 하자는 이야기는 많았는데 진행을 빨리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절판이 되고 났으니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폭이 더 넓어진 인권 내용들을 보충해서 다시 보완된 인권교육 길잡이를 만들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권교육실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경내 : 실제 사랑방 인권교육실이 주최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은 어린이 인권캠프인데, 우리 캠프와 만나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있고 지식 수준도 높은 그런 사람들의 자녀,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인권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우리 사회에 분명한 불평등이 있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랑방이 한정된 형태로만 인권교육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를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그럴 경우 사랑방이 고민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은 실제로 가장 억압받고 가장 인권침해를 당하기 쉬운 사람들과 만나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랑방 인권교육실은 노동자들의 자녀라거나 빈민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인권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은 과제로만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이런 것들을 깨어나가면서 새로운 인권교육의 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영원 : 교육실 모임을 하면 자원활동가들이 인권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

들을 하곤 해요. 침해를 받고 나서야 인권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자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힘있게 제기할 수 있는 게 '인권'인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보다는 어린이들, 아이들 중에서도 약자층에 속하는 어린이들을 만나 인권 교육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만나 인권교육의 실험을 해볼 계획이고요.

### <인권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사전 심의 거부,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의 구속사건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권영화제. 영상물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인권영화제는 영상을 통한 인권교육의 장으로 안정화되었고, 해마다 이어져 2003년 올해 7회를 맞게 된다.

주영 : 97년 2회 영화제와 98년 3회 인권영화제와는 양상이 사뭇 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98년 이후 인권영화제의 조금 달라진 모습들을 이야기해보죠.

정아 : 96년, 97년 인권영화제의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97년도에 집행위원장 구속 사건, 영화제를 못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98년도에는 영화제를 하나, 못하나에 대한 걱정이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97년에 발전기를 준비하면서도 영화제는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98년에는 97년도 경험 때문에 영화제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과 기대가 반반씩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98년에 김대중 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고 집행위원장이 보석으로라도 풀려나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또 모른다는 생각이 반반이었고 그래서 98년도에 동국영화제에서 3회 영화제를 시작할 때 엠비시 9시 뉴스에 두 번째 꼭지에 나올 정도로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 해까지 수많은 작은 영화제들이 검열 문제 때문에 첫날 문을 닫게 되는 상황

이 많았기 때문에 당국의 불허로 영화제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영화제를 할 수 있냐, 아니냐가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별 문제 없이 3회 영화제를 했고 대신 인권영화제가 느꼈던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상영관을 구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영화제가 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를 튜는 것에 대한 일반 극장이 거부감을 보이고,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최근에는 인권영화제에서 그런 문제가 좀 없어졌죠.

또한 인권영화제가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론 불안정한 상태로 98년까지는 영화제를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영화제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방향을 좀 선회하게 된 것 같아요. 작품선정이란지 한국영화에 대한 기대와 격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올해의 인권영화상이란 것도 만들어내고 이제는 (영화제의) 안정화에서, 더 나아가 '좀더 안정적인 상영체제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에서 한달에 한번 정기상영회, 반딧불도 생기게 된 거죠.

주영 : 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없어지면서 사랑방 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제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존재 논의도 있었는데요.

정아 : 98년에는 안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97년에 탄압의 경험을 겪으면서 '영화제를 계속 해야 하나'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계속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슈로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풀리고 난 후에도 영화제를 계속 담보해야 하나'는 것에 대해 98년, 99년에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영화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어느덧 스욱 소멸한 것 같네요. 인권운동단체가 '영화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당대에 분명한 인권적 이슈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 역량설도 있는데, '우리가 역량이 있냐' '영화제답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럴 때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작년 워크숍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 전담 활동가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하면 영화제가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구요. '영화제란 이벤트를 인권단체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변화돼야 한다', '형태가 좀더 일상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변해야지, 한번 반짝하는 이벤트로서 인권영화제는 운동으로서의 약효가 떨어졌다'는 반성도 있었죠.

경내 : 그래서, 우리 '찾아가는 인권영화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정아 : 그게, 지역 영화제의 아픈 경험, 쓰라린 경험(도 있었고), 사랑방 성원들 개개인 별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 중심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역영화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또한 찾아가는 인권영화는 좋다치고 그런데 상시적인 인력의 문제, 그것이 있으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외부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괜찮은 건데 우리가 인권영화제로서 연대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움과 상처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요청이 있어도 외부의 어떤 단체나 영화단체와 선뜻 손잡을 수 없는 연대사업의 어려웠던 기억이 하나 있구요. 또 인권운동이란 것이 문화운동과 손잡기가 어려운 게 우리 내에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분야로 지평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반딧불 같은 것은 꽤 잘 되고 있긴 한데, 우리가 들고 찾아가서 학교나 단체에서 상영을 하는 것은 인력의 문제와 더불어 그쪽과 추구하는 바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불협화음을 사랑방이 운동하는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주영 : 어때요? 인권영화제 상영작 중 특별히 명작으로 기억되는 거 있어요?

경내 : 명작이기보다는 가장 호응이 있었던 건 이대에서 했던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였죠? 체 게바라 열풍을 타고...

정아 : 맞아요. 2000년도에 관객이 제일 많았어요. 실무자로서는 매우 어려웠는데 상영관이 흩어져 있고 기자재도 불안정해서요. 그런데 '볼리비아 일기' 할 때 이대 광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8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이대오르기' 일명 '이데올로기' 계단이라고 부르는 계단에 사람이 꽉 찼어요. 홍석천 씨가 그때 아웃팅을 당하고 난 후 인권영화제 사회를 보고, 해서 훈훈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 <사회권 활동>

- 1999년 1월 사회권위원회 구성
- 1999년 12월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실태' 발간
- 2000년 10월 아셈·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 2001년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2차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한국 정부 보고서 심사 회의 모니터
- 2002년 10월 성북구 하월곡동 인권실태 기획 취재
- 2003년 2월 '사회권규약 해설서 1' 발간

IMF 체제 이후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로 접어들고 사회 각 분야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초래됐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회권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99년 1월 사회권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권위원회의 첫 작업은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사회권 침해 현상을 종합하는 보고서 작성이었다. 그 결과물은 99년 12월에 출간된 '인간답게 살 권리'다. 이후 인권운동사랑방은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보고작업, 사회권을 풀이하는 해설서 작업과 성북구 하월곡동 재개발 지역의 인권실태 기획 취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사회권 운동의 전형을 만들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주영 : 사랑방은 99년에 사회권위원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됐지요. 사랑방이 과거부터 진보적 인권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운동의 지평을 사회권에까지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사회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노숙자, 실업, 사회복지 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되던 때 이런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풀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때마침 사랑방이 어떤 기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에 사회권 활동 시작하자 해서 사회권위원회 발족시켜버렸죠. 그 결과물로 나왔던 것이 'IMF 이후 사회권실태조사 보고서 - 인간답게 살 권리'란 제목의 책이었고... 99년 말에 1년 동안의 작업을 통해 나왔는데, 지금 보면 부끄럽기도 해요. 처음으로 사회권이란 것을 공부하면서 토론하면서 1년 만에 낸 작업물이라 지금 보면 내용이 좀 미진한 면도 많고요. 근데 지금도 교보문고에서 (책이) 나가고 하는데 참 부끄러워요. IMF 이후 사회권 실태보고니까 지금 그것이

아주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리는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인간답게 살 권리' 집필 활동을 하면서 특이했던 것은 자원활동가들이 대거 함께 했던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상임활동가로 함께 일하게 된 허혜영 씨죠.

허혜영(아래 혜영) : 자원활동가의 위치에서 그 활동은 매우 의미가 있었어요. 인권에 대해 그다지 접근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매우 중대한 작업을 맡게 됐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사실 같이 토론해가면서 사회권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노동, 교육, 사회복지, 건강 등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좋았어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단지 노동유연성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권 전반적인, 총체적인 부분을 후퇴시켰다는 점을 보고서 작업을 통해 재확인했던 것 아닌가 생각돼요.

경내 : 어쨌든 이 책이 나와서 사회권이란 말이 '사회화'됐어요. 인권운동에서도 사회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넓어졌지요.

주영 : 2000년에 가면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잖아요. 인권운동사랑방도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에 인권적 차원에서 결합해야겠다고 해서 공대위 활동에 참여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 집회에 참여하고 그 때 한통계약직이라든가 이랜드 등 비정규 사업장이 많았잖아요. 그들 투쟁에 결합했던 것은 의미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주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도 한계이고 계속되는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아셈 2000이란 행사가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데, 민간단체들이 어떤 대응 회의를 갖자고 해서 모였어요. 그때 아셈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일환으로 보면서 이에 대항하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권단체들이 모이고 다른 노동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과 집회도 나가고 집회 때 경찰의 인권침해가 없는지 노란색 잠바 입고 감시반 활동도 뛰어다니면서 함께 했던 기억도 있네요.

그 이후로 2001년에는 한국 정부가 사회권에 관한 2차 이행보고서를 내야 하는 때였는데, 민간단체 차원에서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 사회 전반적인 사회권 문제를 점검하면서 다른 여러 사회권 관련 단체들, 10여 개 단체들과 함께 민간단체 보고서 작업을 했었구요. 너무나 폭넓은 분야의 내용들을 사회권이란 일관된 관점 속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어서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여러 가지 권고를, 나름대로 강한 내용의 권고를 냈던 것,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회단체들이 사회권이란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운동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가 권고를 받기는 했지만 크게 변화된 게 없는 데, 원래 사회권이란 것 자체가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자체의 기초를 바꿔야 하는 것이어서 변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식 몇 가지는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를테면 고용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 재원을 투입하고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기초를 바꾸지 않는 한 사회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영 : 2002년에 사회권 분야에서 사랑방이 한 일은 뭐가 있지요?

혜영 : 서둘러 끝내야 할 과제로 2001년부터 진행해왔던 사회권 규약 해설서 작업이 있죠. 사회권 규약의 총론적인 부분, 사회권의 성격이랄까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의무에 대한 총론적인 해설 작업, 1차 작업은 끝낸 상태인데,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구체적인 권리들을 해설해나가고 있는데 조항 자체를 그냥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런 작업이에요. 하지만 올해는 반드시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영 : 작년에 기획사업반 차원에서 사회권 활동을 하면서 직접 사회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취지로 했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혜영 : 사회권 활동이 지금까지는 이론화 작업이었다면, 실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왔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억압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사회권 운동의 과제를 바라보자는 취지로 성북구 하월곡 산 2번지와 산77번지, 서울에 몇 남지 않은 산동네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사는 이야기를 들었죠. 한 두 달에 걸쳐 이 작업을 했고 결과물은 자료집을 통해서도 나오겠지만 하루소식을 통해 그들의 사는 이야기가 소개가 됐고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얻은 것은 다녔던 사람들(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산동네가 몇 남지 않았는데 재개발, 철거를 통해 해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나마 낮은 수준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취업정보도 얻고 일감도 얻고 공부방도 있고 그랬는데 철거를 통해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간다는 것, 시내의 지하셋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낮은 수준의 공동체마저 깨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또한 구조적인 문제, 빈곤과 사회권의 관계는 빈곤이란 것은 사회권 중 한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연쇄적인 권리 박탈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의 가난으로 인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는 거고, 그 일이란 것은 불안정 저임금 노동이었고, 위험한 노동이었고, 이들이 다치거나 병이 들면 보건의료도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아서 자신의 몸으로 일할 수 없어서 절대 빈곤으로 떨어지는... 그런 주민들을 만나면서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주영 : 사랑방에서 사회권운동은 이미 많은 사회단체들이 각각 사회권 분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권운동의 전형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 같군요.

### <국가보안법 개·폐 활동>

1999년 9월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활동

2001년 1월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 설치' 12박 13일 인권단체 활동가 연합 노상 단식농성

99년 전국적으로 활발한 국가보안법 개폐 투쟁이 전개됐다. 신부들의 단식농성 농성을 시작으로 각계 시민사회에서 농성, 집회, 신문광고, 서명운동이 연일 이어졌다. 여기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자유권규약에 대한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의 결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7조의 즉각적인 폐지 등을 권고해 힘을 보탤다. 1999년 9월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동조 및 이적)의 완전 삭제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7조의 완전삭제를 최소한의 공통 분모로 삼아 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참가하는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활동한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문제의식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이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이자 "수구세력들이 끝까지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7조의 존폐를 둘러싼 싸움이야말로 진정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르

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국보연대' 제안이유 중)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과제로부터의 후퇴가 아니냐는 '오해 섞인 비판'이 있기도 했다.

주영 : 99년에 사랑방이 많이 집중했던 활동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활동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준식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이야기들을 해보지요.

경내 : 정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개정이 이야기되고 있던 때였고, 법무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대체입법이었고... 정부는 대체입법한다고 하고, 민간단체 쪽에선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잘못하면 정부가 폐지하면서 대체입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의 핵심적인 성격이 뭐냐'는 걸 이야기하면서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7조이고, 이것은 남북관계의 경색 혹은 이완에 관계없이 내부의 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보안법 7조의 완전삭제에 동의하는 광범한 단체들을 모아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를 만들고자 했던 거지요. 99년에 이런 내용에 동의하는 공개 제안서를 돌려서 많은 단체들이 모였지요.

정아 : 그 기구에서 만든 신문이 '활보'였지요. 2호까지 나왔어요. 타블로이드판이었는데, 만화도 있고, 7조에 대한 다양한 전사회적인 반대 의견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문화인한테도 글 받고요.

주영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선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활동에 대해 너무 타협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경내 : 그렇죠. 서준식 선생님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었나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때 냈던 글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 7조에 반대하는 이유'인데, 그 글에서 '명백히 말하건대 나는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폐를 이야기하는 데 안주하지 않고 7조 삭제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이유, 어떻게 보면 개량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7조 삭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에 대해 쓰신 글이예요. 오해를 감수하면서 국가보안법 7조 삭제에 매달리는 이유가 활보가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

데, 국가보안법을 남북관계 속에서만 해석하고 제한적인 사람들만이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된다는 논의의 틀을 깨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은 이름이 달라지더라도, 간판이 달라지더라도 테러방지법이라든지, 국민질서 안전법이라든지, 민주질서수호법이라든지 그런 각종의 이름을 달고 국민의 사상을 감시하고 표현을 제약하는 억압적인 도구로서 끊임 없이 자기복제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사랑방 사람들 내에서도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 뜰 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인데,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하느냐 우려가 많았고 그러나 7조가 가장 국보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일정한 합의를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주영 :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한풀 사그러 들면서 이 두 연대기구가 합쳐지죠. 지금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인가요? 사실은 그 이후에 정권 말기라 국가보안법 개폐의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지면서 활동이 지지부진해진 것 같아요.

잠깐 투쟁의 불씨를 당겼던 것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이어졌던 단식농성이었던 것 같은데, 한창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투쟁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환기시켰던 것이 아닐까요. 그때 이미 촛불집회는 시작됐던 거죠? (모두 웃음)

경내 : 한겨울 노상단식농성과 촛불집회...

주영 : 우리 이 시점에서 그 농성은 기념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겨울 노상단식농성이란 게 사랑방 활동가들이나 함께 했던 인권활동가들, 또 외부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정아 : 사실 저만해도 반신반의했어요. 겨울철 노상단식농성이란 게 말이 되나. 그때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해방을 하는지 너무 추웠고 눈이 삼십 몇 년만에 대설이니 뭐니 막 그랬는데, 초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했는데,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그만 하자는 제안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근데 어느 시일이 지나면서 매일 밤 했던 촛불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이슈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지속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주영 : 그 당시 노상단식농성이란 것을 택한 게 명동성당이 더 이상 천막을 치지 못하게 했던 것이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전에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하루인가 (명동성당에서) 파업을 하고서 안 치우고 갔다는 식으로 나쁘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런 안 좋은 조건 속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인권활동가들은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추위 속에서 텐트 치지 않고 비닐을 덮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깨끗하게 투쟁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죠.

정아 : 처음엔 스티로폼 몇 장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가져다 줘서 어찌나 이불이 많던지.

경내 : 처음에는 천막도 안 쳤잖아. 그래서 비닐을 덮고 명동성당 계단에서 비닐 덮고 갔지. 나중에 지지방문을 하셨던 분들이 보다못해 천막을 쳐 놓고 가고...

정아 : 지지방문 하는 사람들이 담요나 모포를 막 가지고 온 게 너무 많이 쌓여서 나중에 사랑방 사람들이 다 세탁하고 보내주고 그랬죠.

주영 : 나중에 다른 농성단들에게 많이 줬죠.

## 2000년

- 2000년 7월 청년후원회원모임 '꿈꾸는 사람들' 발족(7월)
- 7월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 파업장에서의 경찰력 투입과정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활동
- 10월 아셈·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 12월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번역·출간
- 12월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개소

### <꿈꾸는 사람들>

주영 : 2000년 7월에 꿈꾸는 사람들이 발족을 했거든요. 꿈사(꿈꾸는 사람들) 창립 멤버이기도 했던 범용 씨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범용 : 저는 96년 경 학생운동 막바지에 사랑방을 알았고 인권운동에서 뭔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군대 갔다 오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단체로서의 인권운동을 하는 그룹과 대학생 인권운동 그룹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청년인권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몇 명이랑 모여서 그런 문제 의식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권운동사랑방의 후원회원 모임으로 위상을 정하고 새롭게 태어나자고 해서 이름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엠티를 가서 이 모임을 해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서, 생활 속에 인권의 전령사들이 되자, 활동가로서 인권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생활 속에 자그마한, 그렇지만 작지만은 않은 인권적인 사안을 발견해내고 인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석해내면서 삶 자체를 바꾸는 활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취지에서 꿈사가 발족됐고 1년 간 잘 됐던 것은 매주 모여서 생활 속에서 느꼈던 에세이들을 발표했던 거예요. 1주년 기념할 때 자료집으로도 묶어서 재미있게 봤는데 성원들이 새롭게 충원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에세이나 사안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는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사랑방에서도 이 모임은 무엇을 하는 곳이나, 무슨 꿈꿈이나, 후원회원을 하겠다고 단체로 오는 거나 반신반의하다가 1년쯤 지나서 꿈사는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것이라고들 이야기 해서 기분이 좋았구요. 계속 잘 해야 할 텐데, 최근엔 어떻게 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주영 : 요즘 새로운 사업을 꿈사가 하고 있잖아요?

정아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을 홍보하고 진행하는 일을 꿈사가 하고 있지요. 정기상영회 얘기가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작년 9월부터 시작했지요. 처음 발의했을 때는 꿈사가 활동적이었던 때라서 매우 좋아했었죠. 나름대로 꿈도 꾸고 했는데, 그것이 좌절되고 하다가 작년부터 꿈사가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업을 추진력있게 해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 1주일에 한번씩 모이는 모임으로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은 2000년 12월 15일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의 이론을 민중적 관점에서 재정리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보수적, 자유주의적 혹은 관념적 인권론과 효과적으로 대결하기 위한 진보적 인권이론을 세워나간다는 목적 아래 인권운동연구소를 설립한다.

주영 : 인권운동연구소 얘기를 해 볼까요?

경내 : 98년 5월이었나 민변 10주년 토론회에서 서준식 선생님이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셨잖아요. 글의 문제의식이 인권이란 것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함께 태동된 개념이고 근대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는 인권의 개념 자체가 매우 자유권 중심으로 해석이 됐고 한편 자유권조차도 완전히 보장받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사회권은 찬밥 신세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이란 것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보장되기 힘들다고 보았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권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힘, 희망의 언어가 인권의 보편성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이런 것이 인권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저나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렵고도 모호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 선생님은 사회주의자면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셨던 것 같고요.

'인권의 개념 자체가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보편적인 가치일까', '인권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서 다 실현될 수 있을까', '실현될 수 있다면 왜 끊임없는 불평등과 억압과 자의적인 인권침해가 되풀이되는 걸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해야 된다, 매일 활동에만 치여서 우리 앞에 떨어지는 사건 해결에 인권운동을 한정해선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에 대해 인권의 시각에서 근본적인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8년 선생님 글을 계기로 해서 사랑방 내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의 내용을 구체화시켜보자고 했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



서 '안되겠다 결단을 내려보자'고 해서 '우리가 되더라도 뭔가 포스트를 하나 만들어놓고 역할을 주면 하게 돼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2000년 12월에 인권운동연구소가 개설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저랑 박래군 선배가 1기 상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어쨌든 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수행한 것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인권문제들을 연구하기보다는 인권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역사 속에 인권이란 개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권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 속에 근대 초기 자본주의 사회가 동터오는 시점부터 최근까지 인권에 대한 담론이 성장하고 새로운 인권의 구상들이 떠오르고 기존의 인권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해석의 투쟁,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해석이 특정한 것일 수 있고 제한된 것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가지 발견된 지점이에요.

'사람에겐 어떤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이면서도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 인권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려면 이런 권리가 갖는 성격이 무엇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물적 조건이 담보돼야 하는지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억압받는 집단에게 필요한 권리인가에 대해 많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권운동연구소가 3년 째 접어들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 지자로 걸어왔는데 2기를 시작하면서는 애초 인권운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가졌던 초기 관심, 즉 지금 현재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인권의 하나의 목록 속에 포함돼 있는 재산권이란 것이 우리가 지지해야 할 권리인가 하는 것들, 새롭게 떠오르는 권리 개념들을 어떻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인가 등 초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진지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영 : 운영위원들이나 외부 사람들 중에는 인권운동연구소에 대해 '골방에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거냐고 문제제기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경내 : 보통의 연구소들은 기존에 연구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공동의 뜻을 모아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구체적인 운동과 결합된다면 연구주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

는 것 같아요. 근데, 인권운동연구소는 맨땅 위에 건설된 거 같아요. 초석 하나 놔두고 시작을 하는 거라서 기존의 연구역량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연구소의 관심이나 설립배경 자체가 지금의 인권운동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운동론을 만들어낸다거나 연구보고서를 낸다거나 이런 것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하지 않는 고민, '진보적 인권운동', 이걸 화두로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실태조사 사업만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고민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인권운동연구소가 답답해 보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란 것을 진보적으로 재해석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하는 밑거름을 쌓는 작업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이 연구소의 역할인 것 같고, 우리 내부의 활동가들이 다 한번씩 연구를 거치고 난 즈음에 그 때 되면 저는 이제 연구소가 한 단계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땐 구체적인 인권운동론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과의 접목은 연구소를 경험한 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구체화시켜야 하는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답답하지만 길게 보고 기다려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 <인권정보자료실>

주영 : 인권정보자료실이 2000년에 새로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했는데, 98년 이후 자료실의 변화가 있다면 한번 짚어볼까요?

은아 : 98년도에 자료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자료들을 재분류하고 2000년 10월 경에 새로운 분류 체계 하에 인권정보자료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한가지는 2001년부터 인권하루소식 CD를 만들자는 문제의식 속에 검색기능까지 갖춘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구요. CD 작업을 하면서 하루소식 기사가 부분부분 보존이 안 돼 있어서 참 속상했는데요. 사랑방이 자료 보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자료를 잘 보관하지 못했구나 반성이 됐구요.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서도 자료를 잘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한편 새로운 분류체계를 고민하면서, 국제인권기준을 참조해서 분류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분류체계를 만들었고, 인권상황을 그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돼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자료를 축적해서 정리해내는 작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일천하기 때문인 것 같고, 사랑방이 초기에 자료실을 만들었던 문제의식이 이런 자료에 뒷받침되는 전문적인 인권운동, 검색이 잘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다른 운동단체에 비해 사랑방이 진일보했다고 보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내 : 달리 평가할 것은 없지만, 은아 언니는 앞으로 검색 기능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등 자료실의 전문성 강화까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르기 위해선 사랑방의 조직적 역량이 보다 투입돼야 하는 문제인데 새로 변화된 환경에서 자료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랑방 안에서 합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의 논의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001년

- 2001년 1월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13일 인권활동가 연합 노상단식농성
- 3월 대우차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조사
- 4월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2차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사회권연대회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 사회권 이행 보고서 심사회의 참석
- 7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결성 및 참여
- 10월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보고서 발표
- 11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투쟁  
상임활동가 총회, <대표-사무국장제> 폐지 결정  
반성폭력 내규 제정
- 12월 18일 <인권하루소식> 지령 2천호 발행

## <아동, 청소년 권리활동>

- 2001년 10월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 2002년 6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2차 민간보고서 제출
- 2002년 7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 완성
-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2차 보고서 심사회의 참가

인권운동사랑방은 '애정과 보호'의 대상 내지 '관리'의 대상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권리의 주체'로 아동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했다. 2001년 10월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칙의 인권적 문제점을 분석, 발표했고 2002년 7월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를 완성했다. 2002년 6월에는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한국의 아동권 상황에 대한 2차 민간보고서를 제출하고 2003년 1월 정부보고서 심사회의에 참가하는 등 한국 정부의 아동권 이행을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주영 : 아동 청소년 권리 활동이 2001년에 활발했는데요. 교칙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캠페인을 했던 건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간하는 것까지 청소년 권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영원 :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문제로서 교칙 분석을 하게 됐던 것이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로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파트로 사업을 벌여 나갔는데요. 교칙 분석 같은 경우 주체가 아이들이니까 청소년들의 참여 속에서 해나가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교칙 수집도 아이들을 통해 하려고 했는데, 어렵고 해서 결국 정보공개청구란 방식으로 교칙을 모을 수밖에 없었구요.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사문화된 건데 그걸 분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때는 여전히 교칙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많은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

는다고 할지라도 징계를 할 때나 교문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 교칙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칙의 인권적 문제를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활동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개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바뀐 것이 뭔지, 아이들이 어떻게 다르게 느끼고 있는지 올해 설문문을 해 볼 생각이예요.

청소년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별로 이슈화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태에 대해서도 간간히 들어오는 정도. 그것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분석하는 일이 필요했고 기초자료로서 실태 조사를 함으로써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해보는 것을 내부적인 목표로 했는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 노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의 경쟁하듯이 발표를 여기저기서 했어요. 사실 실태조사하고 나서 이슈화는 되고 사회적으로 청소년 노동에 관심을 가지기는 했는데, 현실을 바꿔 내거나 운동으로 더 발전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회에 알리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이것만은 고쳐보자', '이것만은 알려보자' 청소년 노동 문제 중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제기됐던 게 사랑방 내부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을 해서 권리를 찾게 해주자는 게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바꿀 거냐에 대해서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아이들에게는 노동조건 중 한가지를 바꾸는 것보다는 정부가 일하는 아이들의 노동조건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절실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지를 점검하고, 정부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게 필요해요. 내부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주영 : 교칙캠페인의 경우, 사랑방의 활동이 지속되지 못했던 한계를 짚어줬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국가인권위에서 교육부에 학교생활규정(교칙)을 평가해서 권고한다거나, 교육부 자체로도 이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경내 : 우리가 교칙 분석을 했던 것도 그렇고, 2차 아동권 작업을 하면서도, 청소년 노동권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그랬구요.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원칙이란 게 청소년 문제를 어른이 계속해서 떠드는 관행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조사하고 사회문제로 책임지고 이슈화하기에는 청소년 내부 역량이 성숙

하지 못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칙 분석할 때도 아이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활동을 담아내려고 했고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지요. 이런 것이 앞으로도 사랑방이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하는 원칙이고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청소년 인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구해나가는 방식이란 것이 사랑방 청소년 인권 운동이 갖는 차별성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 : 이번에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민간 보고서를 내는 작업을 청소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획)했잖아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 작업이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게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이후에도 그런 시도가 필요한 건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영원 : 사실 민간단체 보고서를 준비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단체들을 만나러 가면 아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은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면 아동이 있고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서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아동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정도 내에서 보호, 보장해주자는 정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 가서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주체로 나서는 단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주체가 형성돼 있지 않은 점이 있는 거고, 민간단체들 중 학생연합이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 자체적으로도 힘있게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이들보고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할만큼의 역량이나 조건들이 형성돼있지 않은 거죠.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고민이 투여돼야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조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창조 :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른의 입장에서, 사회단체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대변만 할거냐는 거죠. 바람직한 것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권리 투쟁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생적으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변만 할 것인지? 만약에 전략적으로 청소년운동의 주체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사랑

방의 청소년 운동이 미흡하나마 아이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고민이 드네요.

영원 : 그런 건 우리가 못한 부분인데,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미약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 주체를 형성시키고자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었던 거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주체를) 형성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청소년 노동이나 교직 문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나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고 어려운 숙제이죠.

### <테러방지법 저지 활동>

2001년 11월 12일 국정원장은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한다. 이것은 <인권하루소식>의 인권 감지판에 걸려들어, 인권하루소식 기사는 인권, 사회단체들의 테러방지법 저지 활동을 촉발시켰다. 11월 20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제 인권·사회 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청와대·국가인권위·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서 발송, 기자회견, 국정원 앞 항의시위, 거리농성, 국회 앞 1인 시위,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 진정서' 제출 등이 이어졌고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은 결국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주영 : 2001년 연말부터 2002년 초반까지 활발했던 투쟁이 테러방지법 투쟁이었는데요. 인권하루소식에서 처음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이후에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했는데요.

은숙 : 11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안 순간부터 불과 한 달 동안에 디스켓 네 개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었어요. 국회의원 전원에게 메일 보내고, 전국 법학자들, 단체들에 소식 전하느라 쉴 틈이 없을 정도였다.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에

기대어 인권의 후퇴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그 침범이 될 법안을 초기에 막아냈고, 여론전에서 승리했는데요. 기본적 인권의 후퇴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힘들었지만 뿌듯한 겨울이었습니. 속상했던 것은 그때가 아동인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였는데, 난데없는 테러방지법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정원은 이날 아동의 인권에도 심대한 해를 끼쳤던 것을 두고두고 책임져야 해요.(웃음)

### <인권하루소식>

주영 : 2001년 12월 18일에 인권하루소식 지령 2천호를 맞고 지금은 3천호를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인권하루소식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존재론이 있을만하면 사랑방 안에서 이야기되곤 했는데 그 얘기를 해볼까요? 인권하루소식 존재론의 공식적으로 붙여졌던 것은 98년인지, 99년 총회였던 것 같은데요. 박래군 선배가 폐지안을 냈고, 이창조 선배가 존속을 주장했는데요.

창조 : 인권하루소식을 없애자는 푸념,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하루소식 그만 만들자'는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불쑥불쑥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 의식으로 제기된 게 99년도의 일이었던 것 같네요. 가장 큰 이유는 '활동가들의 활동 생명을 갉아먹는 거 아니냐'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하루소식 기자들의 생활을 돌아보면, 매일 새벽까지 고된 일들을 하고, 그것이 며칠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지속되니까 인권하루소식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칠 뿐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힘들어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하루소식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활동가들의 활동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라면 현재 인권하루소식의 발행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심각하게 제기됐구요.

이와 달리, 인권하루소식을 계속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루소식이 여전히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건데 사랑방이 모든 인권사업을 할 수 없는 대신, 주요 인권사건과 논의에 대해서 사랑방의 입장을 끊임없이 꾸준히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매개가 인권하루소식이란 점에서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 같구요. 한편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보고자 하는 독자들이 계속 있었던 거구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소식을

계속 유지하자고 했던 건데, 다행스런 것은 하루소식을 폐지하자고 했던 이유들이 하루 소식 운영 과정에서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인권하루소식을 단 2명 내지 3명의 전임자에게만 지우는 게 아니라 사랑방 성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매체로 운영하게 된 것은 진전인 것 같구요. 기자의 임기를 정규적으로 정하게 된 것도 달라진 부분이구요. 하루소식이 활동가들의 지나친 소모를 불러온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운영 상의 진전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내 : 폐지론의 배경이 너무 미흡하게 얘기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아 : 폐지론에는 활동가들의 에너지를 너무 갉아먹는다는 것과 더불어, 그때 당시는 매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요구와 의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활로가 됐던 것 같아요. 한정된 사람들만 봤던 하루소식에 너무 역량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것과 더불어, 여러 사회단체들이 비슷한 매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나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했었는데, 통신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하루소식이 보다 대중화되는 외적 요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경내 : 그래서 예전에는 속보성이 하루소식의 특성이었다면,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속보성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권 분야에서 의제를 만들어내는, 정책적 기능으로 하루소식이 계속 기여할 바가 있고 그 부분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는 기대와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2천호가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뿌듯해하면서 이제 3천호까지 가보자는 생각들을 하는 것 아닌가요?(모두 웃음)

### <대표-사무국장제 폐지>

2001년 8월 27일 서준식 전 대표가 사임한 후 사랑방은 한동안 류은숙 대표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을 하다, 2001년 11월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은 장시간 토론을 통해 대표와 사무국장

직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실현 과정이 어렵더라도 '활동가 전원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로 결의한 것이었다.

;

주영 : 2001년 11월에 총회를 하면서 조직체계 변경을 확정짓거든요. 처음 시초는 2001년 8월의 서 대표님의 사임이었는데 한동안 대표직을 공석으로 두다가 2001년 11월에 아예 대표제를 없애는 조직체계를 확정짓는데, 이 이야기를 해보죠.

경내 : 당시에 다른 단체 조직체계들을 분석하면서, 대표제, 사무국장제 폐지안을 준비했던 게 이창조 씨였던 것 같은데요.

창조 : 글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모두 웃음)

경내 : 그때 대표 폐지론에 대해 우리가 <사랑방=서준식 선생님>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정아 : 사실 사랑방=서준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경내 : 하지만 막상 그것이 대표제 폐지의 이유로 이야기되니까, 즉 대표들이 다른 단체에서 얼굴마담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사랑방이 그런 관행을 되풀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건 다른 단체에서 대표의 역할에 대한 평가였는데, 선생님이 그렇다면 내가 얼굴 마담밖에 아니었던 얘기냐고 하면서 약간 오해하시기도 하셨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새삼 떠오르네요.

창조 : 대표제를 없앴던 것은 명망성에 기초한 활동을 하지 말자는 문제의식에 사랑방 사람들이 합의를 했던 거죠. 주로는 대표들이 바깥에서 외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사랑방 활동가들에겐 명망성에 의존하는 대표제를 두는 게 무의미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일 컸던 것 같구요. 그것과 연동해서 사무국장직까지 폐지한 것은 사랑방의 운영방식을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상부의 사람들이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사업영역들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활동들을 진행하되 수평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문제의식 때문에 대표-사무국장제를 동시에 폐지하지는 결론

을 내렸던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각 활동가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었죠.

정아 : 그 전에 우리가 독립군 논의를 계속 해오면서 과감하게 실시했던 게 상근비를 독립군 정신에 맞게 새로 책정한 것이었는데, 대표-사무국장제 폐지한 것 역시 독립군 정신을 활동 자세에서 실험,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돼요.

주영 : 그 당시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죠? '모두 수평적일 때 무정부주의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단체와 조직에서 대표가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을텐데, 너무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한 1년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는지요? 잘 정착했다거나, 민주적인 운영의 표본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시행착오 중이라거나...

정아 : 불완전하지요. 아직은. 그게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정착시켜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랑방 내에서도 그렇고 운동 내에서도 그렇고 일차적으로 세대교체를 우리가 빨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 해서 민주성이나 발달함 같은 기운, 장점이 우리 내에서 느껴지거든요.

경내 : 대표들이 나쁘게 말하면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건데 좋은 역할로는 단체 창립의 정신을 시대 변화 속에서도 잊지 않고 그 원칙들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대표 1인, 사무국장 1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원칙을 다른 활동가들에게 환기시켜 주면서 이끌어가는 형식이라면, 우리는 대표-사무국장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그런 원칙을 환기하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정책 브레인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 책임성이 우리 활동가들에게 신뢰할 만큼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전체를 조망하고 전망하는 역할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한동안 우리 내부에서 정책적인 기능 같은 것이 방기돼 왔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정책팀이 조직체계 내에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정책팀의 고정 멤버의 역할로만 남겨두지 않고 모두가 활동단위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전체 운동판을 그리면서 우리가 계

속 운동해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내부에 좀더 정착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조 : 아직 평가를 완벽하게 하기가 이른 것 같아요. ;

주영 : 그러면 내년에 또 봅시다. 어떻게 되나.(모두 웃음)

### <반성폭력 내규 제정>

2001년 11월 인권운동사랑방은 여러 달의 논의를 거쳐 상임활동가 총회에서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한다.

주영 : 2001년 11월에 사랑방에 중요한 규칙 하나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했던 겁니다. 반성폭력 내규 제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정아 : 사랑방 안에서 남녀 평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 조금 불미스런 일이 있었죠. 조직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문제를 몇몇 사람이 돌발적으로 처리해버리고, 나머지 사람 중에 한 명이 결국 그것은 가부장적인 관행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구요. 또 하나는 활동가 연합 엠티를 갔을 때 우리 활동가의 반여성적인 발언이 동기가 돼서 조직 안에서 기준도 세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징계하고 교육하고 의식수준을 맞춰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발단이 돼서 사랑방 안에서 반성폭력 내규를 만드는 위원회가 구성되게 됐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내규의 초안을 여러 차례 냈고 성원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었죠. 근데 그때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활발하고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발현되면서, 다른 문제의식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내규가 만들어졌지요. 내규에 따라 반성폭력위원회가 만들어졌구요. 반성폭력 위원회는 일상적으로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신고를 받

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 그 이후에 다행히도 그런 일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는데(모두 웃음) 교육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전에 정희진 씨한테 교육을 받았지만 그건 내규 제정 과정에서 했던 거예요. 반성폭력위원회는 교육은 한번도 하지 않고, 농반 진반으로 '자꾸 이러면 반성폭력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경고성 멘트에만 이용됐을 뿐이죠. 위원장의 변을 들어볼까요?

경내 :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토론 자체가 교육적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모두 웃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폭력 위원회가 유명무실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럼에도 여성활동가들이 우리 안에 많은데도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지난 한해 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반성하구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려요.(모두 웃음)

은아 : 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경내 : 내규 제정 과정에서 논쟁됐던 것 중 대표적인 게 이미 정아 언니도 얘기했지만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진정함과 동시에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였지요. 우리 내규는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사건은 성립하지만 성폭력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후에 위원회의 판단을 2차적 과정으로 뒀던 것이 합의사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했던 논쟁들이 합의는 됐지만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내규 만들어놓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규도 계속 점검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빨리 탄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아 : 문구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이런 논의도 계속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젠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평등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됐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반성폭력 위원회가 앞으로 교육과 우리 내부 시스템 점검 장치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창조 : 혜영 씨 들어왔을 때 이 문제 교육받았어요?

혜영 : 아니요.

창조 : 전혀 모르죠? 신입 활동가가 들어올 때,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것은 반성폭력 위원회의 실수네요.

해정 :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죠. (모두 웃음)

정아 : 반성문을 받아야 할 지경이에요. 남성활동가로서 할 말 없어요?

창조 : 없어요. 아, 한가지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으로 넣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 2002년

- 2002년 1월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대학생 인권캠프 개최  
인권단체 '수지김 사건 조작' 책임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고발
- 2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활동
- 4월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공동 주최  
국가인권위법 제정 1주년 토론회 인권단체 공동 주최
- 5~6월 발전노조 인권탄압 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 활동
- 6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차 민간보고서 제출
- 7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 완성
- 9월~ '반딧불'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시작
-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 참가
- 10월~ 성북구 하월곡동 인권실태 조사 및 취재
- 11월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공동 개최

###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운동>

2001년 연말 수지김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인권운동사랑방은 6개 사회단체와 함께 2002년 1월 30일, '수지김 사건 조작'의 책임자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했다. 이후 인권운동사랑방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운동 사회단체협의회'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라는 서명운동, '시효배제 특별법'의 입법 청원, 토론회, 국정원 앞 집회 등의 활동을 벌였다.

주영 : 2002년에 한 해를 계속 관통했던 활동이 수지김 사건의 진상이 폭로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활동이 계속 전개됐는데요.

창조 : 사랑방에서 수지김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기로 한 배경은, 일단 수지김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가져다주고 언론 지상에 보도되는 시점에 사랑방에 수지김 가족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구요. 그러면서 사랑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시작했는데, 이 사건 대응이 갖는 의미를 보면, 기획사업반의 고정적인,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 사안을 받았다는 것이 한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전에 인권현안을 다루는 팀이 했던 일이 단기적으로 기민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수지김 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 문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사업에 임했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대응 과정을 설명하면, 수지김 사건에 대한 대응을 결정한 이후에 개별사건 해결에 집중할 것인가, 수지김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 중 후자의 결론을 내린 것이었고... 그래서 2002년 1월말부터 장세동 고발을 시작해서 여러 사회단체들을 조직해서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고 1년 동안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지요. 기자회견도 여러차례 가졌고 2달간에 걸쳐 거리캠페인도 진행했고, 집회도 했고,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했구요. 이 운동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 <인권활동가 대회>

2002년 11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은 30여개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 인권운동의 현황 공유 및 활동평가 그리고 인권운동 연대의 전망 모색을 위한 '전국인권활동가대회'를 공동 개최, 참여한다.

주영 : 인권활동가 대회를 2002년 11월에 개최했는데요.

창조 : 인권활동가 대회는 2002년 가을에 본격 논의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인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해왔고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소 그에 이은 인권단체연대회의 해소 이후에 공동 행보할 수 있는 틀을 갖출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됐는데요. '인권단체들 내에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네트워크를 위한 실천이 없었나하면 그건 아니고, 발전노동자들 인권침해 실태 조사작업,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단식농성에 대한 연대 활동 등 일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동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방 내부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과 아울러, 다른 단체들 또한 인권단체들 간에 네트워크, 최소한의 인권활동가들의 모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만나면서 2002년 가을에 6개 단체가 인권단체 네트워크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인권단체들이 네트워크를 당장 구성하는 것보다 전국각지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친목도 다지면서 향후 연대를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부터 갖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아래 활동가 대회라는 것이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이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2002년 11월에 활동가대회를 열 수 있었던 거죠. 예상보다 많은 인원, 14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각 단체 활동가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향후에도 2회, 3회 인권활동가들이 모임 수 있는 대회로 만들자는 합의가 이뤄졌고요. 인권단체들의 고정적인 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주영 : 이것으로써 98년부터 현재까지의 인권운동사랑방이 걸어온 길에 대한 좌담을 마칩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10년 그리고 내일 3.

### -사랑방의 내일을 향한 고민과 바람<sup>2)</sup>

주영 : 모두 10년을 다 돌아보게 됐는데요. 마무리로서, 사랑방의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보면서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 돼야 할지를 각자 이야기해봤으면 해요.

경내 : 큰 운동의 그림을 그리는 역량이나 관심이 사랑방 안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나 말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 활동하면서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 가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권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진보적 인권운동을 구체적인 그림을 개발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한가지는 인권 의제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 최대한 활동이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인권활동도 구체적인 지표로 아동인권을 평가하는 작업 뿐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권교육도 마찬가지로, 사회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권운동이 현장성을 보다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혜영 : 일을 시작한지 한달 쯤 넘었는데,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전망을 말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하루소식을 하면서 취재를 다니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인권현안에 관심을 갖고 기사도 많이 쓰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하루소식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후에 기사들을 나중에 보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접근이 제가 생각하기에 맞

2)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1명(김영원, 김정아, 류은숙, 박래군, 배경내, 범용, 유해정, 이주영, 이창조, 최은아, 허혜영/ 고근에 써는 휴가 중이라 빠짐)이 '인권운동사랑방의 내일'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과 바람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다는 생각이 들구요.(모두 웃음)

그런 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의 정체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언론사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에 찾아가고 이슈를 발굴해 내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 사랑방 한달 있으면서 이런 건 고쳐야겠다는 건 없었어요?

혜영 : 있죠 (웃음)

사람들 :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네.

혜영 : 무척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운영 구조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회의 때는 아직까지 잠잠하지만 말예요.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사랑방은 정말 슈퍼맨을 원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력적으로, 능력 면에서 부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의 능력 탓,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씩 활동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피로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옳은 건가 뭔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체력, 능력은 다양한데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아 : 저는 사랑방이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진보적 인권운동이 무엇이나 규명해내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독립군 정신을 실현시키려는 것이 두 가지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이 발전적으로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랑방 운동이 발전적으로 독립해 나가는 운동, 사랑방 자체를 계속 키우려는 생각보다는 쪼개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꿈을 좀더 실현시키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창조 : 사랑방에서 일하면서 제일 신났던 것은 싸움이 분명했을 때가 신났던 것 같아요. 우리의 상대가 분명하고 전선이 분명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열의에 불타고 그럴 때가 가장 신나게 활동했던 때라 생각돼요. 사랑방이 좀 분위기가 역동적인 분위기가 되겠다는 차분하게 자기 영역에서 묵묵히 진행하는 스타일들인데, 이런 것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때로는 특정한 문제와 사안을 가지고 사랑방 전 역량이 결집하고 분출시키는 과정을 밟으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각 사업들이 쪼개져 있는데, 그것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그 영역에 안주하게 되고 자기 사업만 먼저 보게 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오는 폐해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성원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점들을 지혜롭게 해결해나갔으면 합니다.

해정 : 다른 분이 인권운동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동시에 우리가 각자 분화돼 있는 사업 안에서 그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이중적인데, 현안을 잘 대처하지도 못하면서 매일의 사업에 치여서 진행하는 속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이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놓치면서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교육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 인권사업 때 얘기한 것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 일의 주체가 되도록 사랑방이 같이 해줘야 하는 건데, 사랑방이 그냥 스스로 해버리는 것들, 감옥인권운동하면서 수용자들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도 원래 이 운동이 가야 할 길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많이 들구요. 그래서 자기 사업단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그 그림에 발을 맞춰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론, 자기 사업에 안주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뿐 아니라 다른 사업단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겠다 싶어요.

영원 : 10년을 보면서 이런 걸 어떻게 다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 계속 활동을 확장하고 이만큼의 사업을 다 벌여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까 정아 언니가 얘기했듯이, 이 안에서 우리가 몸을 크게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드는데 작년 워크숍 때 이런 얘기들을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전히 모두 '유지'하기로 하는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혜영이가 얘기했듯이 사랑방이 정말 수퍼맨을 원하는가 하는 고민이 저는 지금도 들어요. 정말 그런 것을 다 해내야 하는가,

갈수록 당면 체계로 모든 일이든 다 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놓치지 말고 가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량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거기에 투여돼야 하는 것처럼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직적인 입장으로 관철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영 :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에게 다 나와서 결국은 중복되는 얘긴데, 하루소식 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어떨 때 나 스스로도 내가 운동하고자 했던 꿈이나 나가려고 했던 방향이 있는데, 매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수첩에 적어놓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체크하게 되는 약간은 사무원 같아진 느낌이 받고서 문득 놀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럴려고 운동하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고민할 때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앞 분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위해 다른 사회운동과 함께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론 현장에 좀더 밀착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수퍼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든 일을 하면서 꿈도 꾸고, 일도 더 구체화시키고 그래야 하니까 말이죠. 휴우~ (모두 웃음) 한숨이 나오는데 그래서 진짜 사랑방 활동 중에 뭔가 줄이거나, 너무 사랑방 자체가 커져서는 안되겠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늘어나서 사랑방 여러 모임들이 독립하기 전 단계로서 우리 일을 나눠서 해야겠다 싶어요. 이런 걸 올해 안에 해야할텐데 사실 일을 줄이는 것을 줄이자고 하면서도 안 줄고, 사람들이 느는 것은 늘 수 있을까요? 올해는 아무튼 우리 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좀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창조 : 올해를 부흥의 해로 만들자니까! (모두 웃음)

은아 : 사랑방도 어느새 백화점처럼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맞나 싶어요. 이 일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혹은 유지한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을까, 유지에 급급해 사업을 그냥 안고 나가면서 자기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래군 : 사랑방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진보적 인권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진보'가 선언적으로만 '진보'가 아니라 구체화시켜 나가는 앞으로의 10년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방의 구조가 이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맞나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인권운동사랑방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런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단위는 독립시켜 나가고 사랑방은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식으로 가볍게 가야 풀리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여러가지 다 하는 게 종합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일 따라가기에 급급하기도 하구요.

또 한가지는 진보적 인권운동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해결사 노릇이 아니라 역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다면 꼭 그것이 인권운동으로 수렴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활동가들도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현실적 문제, 생계 문제로 지쳐버릴까 걱정이 되고요. 사랑방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무척 소중한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동을 나눠야겠죠.

진보를 향해 가는 길이란 화려할 수 없고 안락할 수도 없지요. 그거 알면서도 가는 거잖아요. 어수선한 과정들이 있을텐데 진보의 쫓대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운동은 보다 낮아져야 하구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가는 길 찾아질 거예요.

범용 :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가치는 더욱더 중요해질 거고, 그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이 해야할 역할도 보다 많아질 거라고 생각돼요. 사랑방이 주위의 기대에 부합하고 나름대로 한 단계 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랑방이 지향하는 이상과 변화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사랑방이 정세분석력을 높이면서 메우고, 또 한편으론 주위의 기대와 사랑방의 역량 사이의 간극이 있을텐데 사랑방이 활동의 기획력을 높여야 할 것 같고... 세 번째는 기본 활동과 현안 대응 사이에 많은 갈등을 느끼는데 이 부분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은숙 : 10년이 눈 깜짝할 새에 갔고, 언제나 중요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할 새가 없었어요. 과제가 항상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 점이 사랑

방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고요. 앞으로 펼쳐질 날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적의식과 과제가 흔들릴 때가 활동가들한테 사실 가장 힘들잖아요. 생활고는 계속될 것이고 몸도 항상 피곤할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살아갔으면 해요. 그것과 더불어 살아야 할 때 극복되는 것이 아닐까.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도 옆에 있는 동료들이 소중한고, 동료들이 옆에 있는 한 사랑방은 딴 생각이나 딴 짓을 못할 거예요. <끝>